

# 태풍보다 무서운 ‘주 52시간’ ‘통학버스 갇힘 사고’ 막는다

## 수산가공-유통업체, 4만 곳 중 대응 마련 6% 뿐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55개 사업체 실태조사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근로제)에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가 약 4만 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사업체는 6%에 불과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만2900개 등 약 3만9600개로 추산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도 특례가 존치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향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해양수산업 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 뿐이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

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MI는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MI는 우선 해양수산업 분야 기업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 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MI 관계자는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교육부

유·초·특수학교 1만5000대  
대당 30만원씩 총 46억 지원  
유아 버스에 우선 도입 권고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하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



지난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방문객들이 한 업체가 전시한 ‘차내 실내 영상 전송 시스템’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 초·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대당 30만 원이 지원돼 장치가 설치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우선 도입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들이 버스에 갇힘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하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 국토부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 민간 합동 실태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10월 초까지 민간 및 소규모 공사장의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점검반은 지난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산하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이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게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이다.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은 물론 공사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불시 점검도 실시 중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50% 확대

#### 농식품부 농산물 특별대책 추진기간 예년보다 앞당겨 3주간 진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련, 포기당 배춧값은 8월 상순 3593원에서 하순에는 5861원까지 올랐고, 무는 개당 8월 상순 2397원에서 8월 하순에는 2782원까지 올랐다.

소고기는 8월 하순 가격이 전년보다 8% 올랐고, 닭고기는 10% 올랐다. 밤도 지난해보다 39% 비싸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특별대책 추진 기간을 예년의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한다.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은 평상시 하루 5369톤보다 1.4배 많은 하루 7252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물량은 12만톤 수준으로, 대책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공급량은 지난해 8만톤보다 51% 증가한다.

농협과 대형마트 등 온라인·직거래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수요가 물리는 과일과 축산물은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는 지난해 2544곳에서 올해 2686곳으로 늘린다.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영 흡소평을 통해서도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을 전체의 50% 이상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미세먼지 해법 머리 맞댄다… 과학자 대토론회 개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는 지난 5월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

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협의체는 사전 접수 기간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

색할 예정이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우본도 간편결제 도입… ‘포스트페이’

우체국 창구·CU서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상품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된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무료다.

이번에 선보이는 결제서비스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 결제용 바코드를 선택한 후 우체국 우편창구와 CU편의점에 제시하면 바코드를 스캔해 결제가 이뤄진다.



모델이 우체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우체국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오는 11월까지 포스트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우체국 쇼핑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연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대교협 현직교사 375명 수시 특별상담 진행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19 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현직 교사 375명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특별상담을 벌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지원을 돕기 위해 24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입특별상담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전화(1600-1615)와 온라인(http://adiga.kr)으로 무료 제공된다. 전화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상담은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